
對국민 경제인식 조사(3차) 분석 결과

2020.1.6(月)

1. 조사목적 및 조사개요 / 1
2. 주요 분석 결과 / 2
3. 정책적 시사점 / 11



보고서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. 조사목적 및 조사개요

□ 조사 목적

- 각종 경제통계지표들 뿐 아니라 산업·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 파악 및 2018.8월 및 2018.12월 수행된 제1~2차 조사와 비교 분석
 - 문재인정부 출범 4년차(32개월) 국민의 체감 살림살이 평가 및 전망
 - 소득주도성장, 일자리, 최저임금인상,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, 탈원전, 부동산대책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평가
- 연령·지역·정치이념성향·직업 등에 따른 국민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對국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
□ 조사 개요

○ 조사일시

- 2020년 1월 2일(목) 10:00~21:00, 1월 3일(금) 10:00~12:00

○ 모집단 및 표본 크기

- 모집단 :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, 표본크기 : 1,953명
- ※ 응답률: 1.70% (총 114,756명 연결)

○ 조사방법 : ARS 전화조사

- 휴대전화 RDD 1,353명 (69%), 유선전화 RDD 600명 (31%)

○ 표본오차

- 95% 신뢰수준에서 $\pm 2.22\%P$ (최대허용 표집오차)

※ 통계실사는 여론조사실, 조사기획·결과분석은 경제비전센터에서 수행

2. 주요 분석 결과

① 국민 생활경제 평가

□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.3%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**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** 인식

○ 좋아졌다는 국민은 그 절반 수준(24.2%)

○ 부정인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(43.7%(18.8)→46.9%(18.12)→47.3%(20.1))

- 긍정인식과 부정인식 간 간격차는 미미한 수준

○ 남성, 30·40·60대, TK·PK지역, 보수·중도, 농임축산업·자영업·판매영업·생산기능노무직군은 부정평가 비율이 평균(47.3%)보다 낮음

- 여성, 20·40대, 서울인천경기·충청·호남·강원제주지역, 진보, 사무관리전문·주부·학생직군은 부정평가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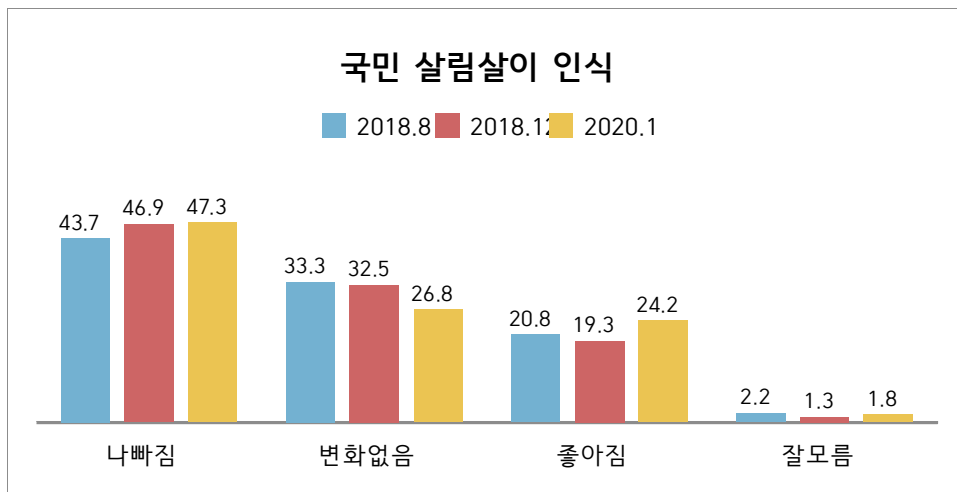
□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생활형편에 대해서도 40.6%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긍정적 전망(30.0%)보다 10.6%p 높게 나타남

- 국민 생활형편: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 생활형편 평가

• 좋아졌음 24.2%, 비슷 26.8%, 나빠졌음 47.3%, 잘모름 1.8%

- 국민 생활형편 전망: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동안 생활형편 전망

• 나아질 것 30.0%, 비슷 28.3%, 나빠질 것 40.6%, 잘모름 1.1%



②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성적표

□ 32개월간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아주못함(가)이 30.0%로 지배적이며, 부정평가(46.7%)가 긍정평가(33.9%)보다 12.8%p 높게 나타남

○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

-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음

○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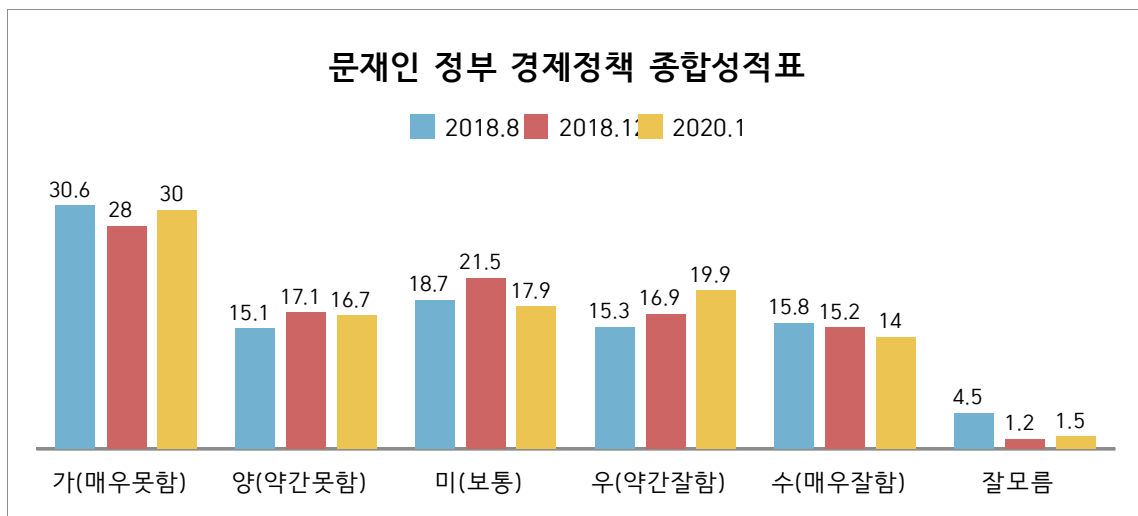
-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25.1%(18.8)→32.2%(18.12)→32.8%(20.1)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, 긍정인식 비율은 64.4%→39.0%→45.0%로, 낮아진 후 다시 높아짐

응답자 구성		잘함(%)	못함(%)
이념성향별	보수(32.4%)	27.2	57.1
	중도(27.2%)	25.3	54.7
	진보(40.4%)	45.0	32.8

※ 20·30대, 자영업·생산기능노무직, PK·TK의 부정평가 비율이 평균을 상회

- 경제정책 종합성적표: 현 정부 32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

- 수(아주잘함) 14.0%, 우(잘함) 19.9%, 미(보통) 17.9%, 양(못함) 16.7%, 가(아주 못함) 30.0%



□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

○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**소득주도성장**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27.4%로, 1년전 조사(29.1%)에 비해 낮아진 반면, 보완·수정·폐기 등 반대 의견은 68.4%로, 1년전(67.8%)보다 높아짐

※ (부분)보완을 제외하면 지속추진 찬성 27.4%, 반대 44.0%로 평가할 수 있음

- **지속추진 찬성 27.4%, 반대 68.4%, 잘모름 4.2%**

• **지속추진해야 27.4%**, (부분)보완 24.4%, 전반적 수정 22.7%, 폐기 21.3%, 잘모름 4.2%

※ [2018.12월조사] 지속추진 찬성 29.1%, 반대(수정·보완·폐기) 67.8%, 잘모름 3.1%

□ 일자리정책 평가

○ 현 정부의 **일자리정책**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(49.9%)이며, ‘급격한 최저임금 인상’ 및 ‘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’을 그 주된 요인으로 인식

- 심각한 문제는, 향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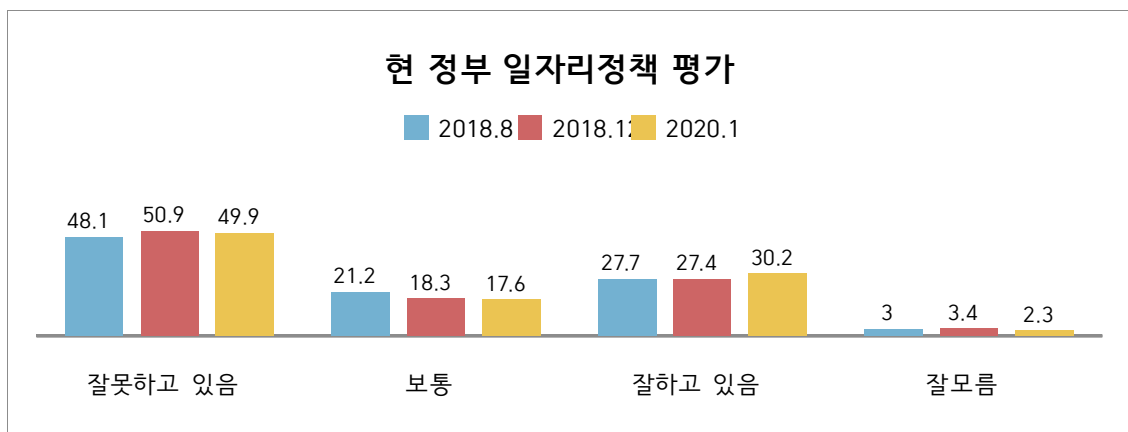
- **일자리**: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

• **잘하고 있음 30.2%**, 보통 17.6%, **잘못하고 있음 49.9%**

※ [2018.12월조사] 잘하고 있음 27.4%, 보통 18.32%, 잘못하고 있음 50.9%

- **잘못한 이유**: 최저임금 대폭인상(35.3%)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, 이어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확대 정책(24.4%), (청년)실업률증가(19.4%) 순

- **향후 고용상황**: **나빠질 것(47.2%)**이 좋아질 것(26.4%)이라는 응답의 2배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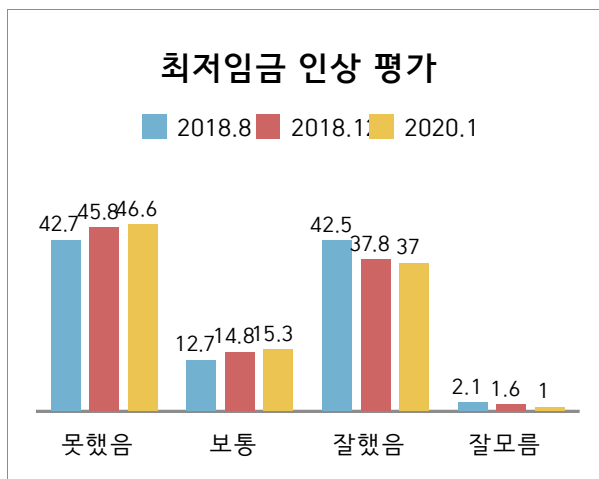


□ 최저임금 정책 평가

○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으며,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
- 1년 전(2018.12) 조사 대비 금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.8%p 줄은 반면,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0.8%p 증가
- 보수와 중도 공히 (아래 표에서 보듯이) 부정적 여론이 월등히 높은 반면, 진보성향 응답자는 긍정 여론이 높게 나타남

※ 1년 전 조사에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들도 못함(38.3%)이 잘함(34.5%)보다 높게 나타남



이념성향별 평가

응답자 구성		잘함(%)	못함(%)
이념성향	보수(32.4%)	30.4 (23.1)	55.3 (58.0)
	중도(27.2%)	29.6 (22.3)	54.4 (58.0)
	진보(40.4%)	47.4 (34.5)	34.5 (38.3)

※ 괄호 안은 2018.12월 조사 수치임

□ 재정투입 확대 정책 평가

○ 공무원수 증원,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우세

- 무엇보다 나라곳간의 고갈을 크게 염려(54.5%)
- 재정정책 :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(공무원수 증원,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, 일잘안정자금 지원 등)에 대한 평가

• 잘하고 있음 37.1%, 보통 12.1%, 못하고 있음 49.1%

※ [2018.12월 조사] 잘하고 있음 32.9%, 보통 16.4%, 못하고 있음 48.0%

- 불만족 이유: 재정고갈 우려(54.5%), 국가경쟁력약화(18.4%), 공공부문 비대화(13.9%), 민간경제활력 저하(11.5%) 순

□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평가

○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.9%p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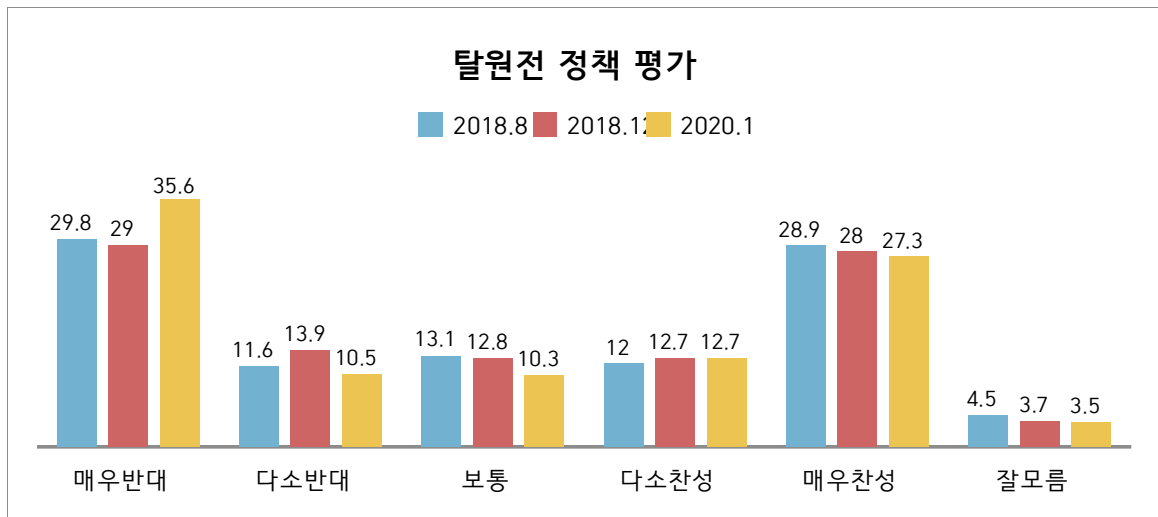
-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‘보수·중도=반대, 진보=찬성’ 으로 극명하게 대비

※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됨

- 탈원전 : 탈원전 에너지정책 찬반

• 찬성 40.0%, 보통 10.3%, 반대 46.1%

※ [2018.12월조사] 찬성 40.79%, 보통 12.8%, 반대 42.8%



이념성향별 평가

응답자 구성		찬성(%)	반대(%)
이념성향	보수(32.4%)	29.8	56.5
	중도(27.2%)	30.6	55.0
	진보(40.4%)	54.6	31.8

○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“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” (40.7%)이 전기료인상/가계부담증가(18.0%), 원전수출악영향(17.8%) 등의 이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

□ 부동산 정책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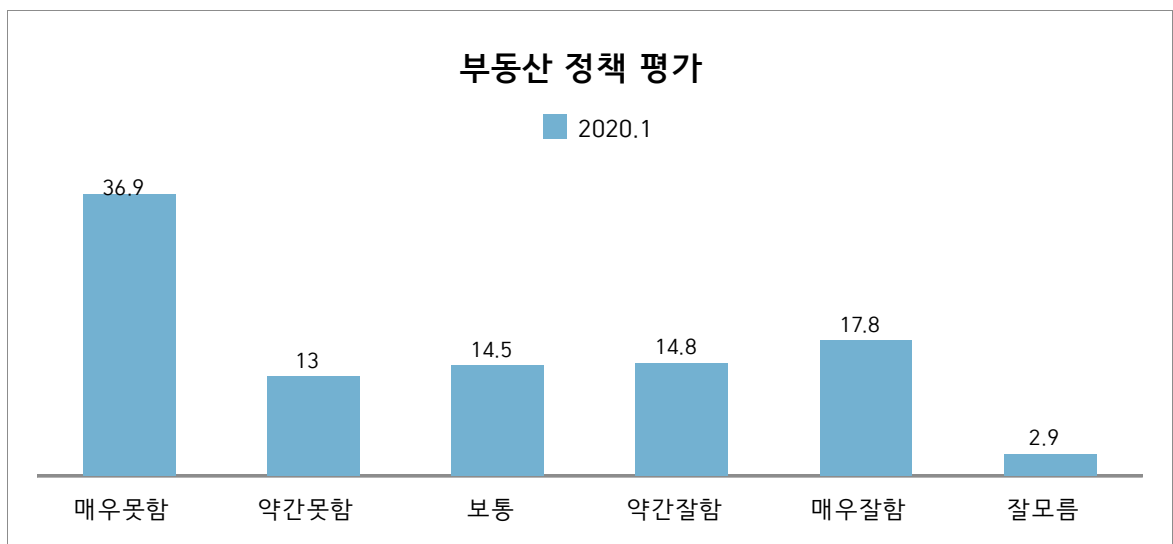
- 문재인 정부의 **부동산정책**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17.3%p 높게 나타났으며,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 대책보다는 ‘단기적 미봉책에 의존’ 함을 지적

※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, 60대와 더불어 20대도 평균보다 높은 부정평가 수준을 보임

- 부동산 정책 : 부동산 정책 평가

- 잘하고 있음 32.6%, 보통 14.5%, 못하고 있음 49.9%

- 잘못된 이유: 단기적 미봉책에 의존(33.4%)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, 이어서 집값 양극화 심화(19.6%), 지나친 부동산 과세(18.2%), 정책의 일관성 결핍(13.6%), 공급대책 등한시(13.0%) 순



③ 경제정책의 우선순위

□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**소득양극화(45.1%)**를 꼽았으며, 이어 인구감소(16.6%), 성장률 하락(15.7%), 협력·신뢰부족(10.7%) 순

○ 특이 사항은, 2018.8월 조사에서 12.2%에 머물렀던 ‘성장률하락 우려’가 12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점임

□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격차해소와 더불어 일자리확충과 기업투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,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로, ‘**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개혁**’을 주문

○ 2018.12월 조사 대비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요구와 복지개혁 요구는 각각 4.3%p, 2.1%p 각각 감소

- **정책우선순위:**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

• **소득격차해소(26.6%), 일자리확충(20.0%), 기업투자확대(16.7%), 공정경제실현(15.5%)** 순

※ [2018.12월 조사] **소득양극화(45.1%), 성장률 하락(17.5%), 저출산·인구감소(12.4%), 사회적자본 부족(10.4%)**

- **경제개혁분야:** 지속·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경제개혁 분야

• **경제전반규제개혁(23.0%), 노동시장구조개혁(21.2%), 복제제도개혁(17.2%), 4차 산업혁명규제개혁(16.9%)**

※ [2018.12월 조사] **노동시장구조개혁(25.59%), 경제규제개혁(20.5%), 복지개혁(16.5%)**

3. 정책적 시사점

□ 분석결과 주요 시사점

- 국민들은 자신의 **생활경제형편**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
 -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7개월간에도 나빴고 현재는 더 나빠졌으며,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도 나빠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 여론조사·분석을 통해 확인

- **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**에 대해 국민의 **부정적 여론**이 매우 높으며, 2018.8월과 2018.12월 조사에 비해 악화됨을 확인
 - 소득주도성장, 최저임금인상, 재정확대, 탈원전 등 대표적 J-노믹스 정책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 추세
 - ※ 금번 조사에 신규 추가된 부동산정책의 경우 부정 여론이 긍정을 압도
 -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trade mark인 **소득주도성장, 탈원전**의 경우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**보수·중도=반대, 진보=찬성**의 프레임으로 극명하게 대비될 뿐 아니라, 1년 전 조사 대비 예상보다 그 변동 폭이 좁은 점에 주목할 필요
 - 이는 **소득주도성장, 탈원전** 등의 정책용어가 정치적 이념지향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의미
 - 특이사항 중의 하나는, 보수는 물론 **중도 성향**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(54.7%)인 경우가 긍정적(25.3%)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임 (1년전에 비해서도 확대)

□ 향후 계획

- 금번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
 -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, 부동산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오류와 문제점을 검증하고, 바람직한 대안 제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
 - 분석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, 여연정책연구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
 - ※ 4.15총선 대비 정책공약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
- 추후 특정 기간별 조사를 정례화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추이를 지속적으로 고찰할 계획

작성 :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☎ 02-6288-0531, 010-3168-1306